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8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목 차

■ 2018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2018년 글로벌 10대 트렌드의 주요 내용	2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홍 준 표 연 구 위 원 외 (2072-6214, jphong@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8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 글로벌 10대 트렌드 선정

2018년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경영, 기술, 에너지·자원, 사회·문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8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① 글로벌 '스트롱맨(Strongmen)'

동북아 주변국 지도자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외교 전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기 위한 '신(新)시대 중국 특색 대국(大國)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선 연임이 확실시 되는 푸틴 대통령도 자국 이익 확대를 위한 외교 전략을 강화할 전망이다. 글로벌 스트롱맨 간 파워게임 심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한국은 실리 중심의 외교 강화로 이익 극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② New 세계 경제대통령의 등장

'세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美 연방준비제도(Fed) 차기 의장으로 제롬 파월(Jerome H. Powell)이 지명되면서 2018년 3월부터 4년간 미국의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수장 역할을 하게 된다. 파월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금융규제 완화 등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맞추며, 온건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경제 성장 경로, 2018년 FOMC 위원들의 성향 등에 따라 美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미국 금융시장 규제 완화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③ Xi's Reform

중국 시진핑 정부 2기가 공식 시작되는 2018년에는 중국 경제의 회색코뿔소라 불리는 그림자금융發 금융리스크 확산 억제, 과잉생산 산업의 구조조정이 경제 개혁의 핵심 목표가 될 전망이다. 첫째, 중국 경제의 회색코뿔소인 그림자금융發 금융리스크의 확장을 통제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의 안착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철강, 시멘트 등 산업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유희설비 강제 폐쇄와 같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조치를 실행할 전망이다. 한국은 그림자금융 개혁,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정책적 변화를 추적하고, 중국 리스크의 국내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④ 레버리지 확대의 시대 도래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및 글로벌 투자 환경 개선 등으로 경제 주체들은 레버리지를 늘리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2018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주요국의 주택 및 증권 시장과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이 소비 및 투자 등을 위해 신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레버리지 확대를 기회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국내 자산시장에서 외국인자본 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⑤ Wageless Recovery

Wageless Recovery란 경기 회복과 고용시장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오르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주요 선진국의 고용주들이 정규직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임시직 고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자리가 음식·숙박업 등 저임금 업종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인 금융업, 제조업 일자리 회복 속도는 저조하다. 높은 임금을 받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 등 역시 임금 상승을 정체시키는 요인이다. 기술 혁신이 늦어지고 투자 감소 등으로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정체되었다. 미흡한 임금 상승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제약하여 소비 부문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상승률을 낮춰 통화 긴축 속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⑥ 선진국의 Tripple Advantage

최근 중국 등 신흥국의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한편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으로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선진국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등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시장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 자국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의 본국 회귀가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⑦ 하이퍼-코피티션(Hyper-Coopetition)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전세계 기업과 국가가 나서서 유리한 사업상 위치를 점하려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의 핵심 수단으로 경쟁, 업종, 규모를 가릴 것 없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누구와도 손을 잡는 하이퍼-코피티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동업종, 대등한 경쟁자 등 다소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된 '코피티션'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업 차원에서는 주로 AI 기반 플랫폼을 축으로 한 협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플랫폼간의 협력인 'Platform of Platform'으로 발전하고 있다. 산업 차원에서는 기기간, 기업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서플라인 체인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업종

표준적 플랫폼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업종 및 업체가 손을 잡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 생태계를 형성하여 유리한 시장 개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 산업, 국가 모두 하이퍼-코퍼티션 전략을 활용할 줄 알아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과 성장을 약속받을 수 있다.

⑧ 오모 사피엔스(OMO Sapiens)의 등장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Online Merges with Offline)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서 인간의 행동방식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급증하는 스마트폰 활용률, 매끄러운 결제 시스템, 저비용 고성능 센서, 인공지능의 발전 등 4가지 요인이 OMO의 도래를 가속화하고 있다. 교통, 쇼핑, 교육 등 거의 모든 일상생활 영역에서 OMO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OMO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부작용 예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⑨ 3-E 에너지 트렌드

국제 유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시장의 단기적인 수급 균형 이탈 여부와 함께 중장기적인 친환경 투자 확대 및 4차 산업 관련 기술 발전에 따르는 에너지 효율성 강조 등이 예상된다. 첫째, 균형 지속 여부(Equilibrium or not)이다. 2018년 원유 시장은 대체로 균형에 도달하겠지만 OPEC 감산 실행 미흡 및 미국 원유 생산 확대 강도 등에 따르는 균형 이탈 여부가 주목된다. 둘째, 친환경(Eco-friendly) 투자 확대이다. 2020년에 시작되는 새로운 기후체제(파리기후협약) 출범 준비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투자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셋째, 효율성(Efficiency) 추구 확산이다.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거래 측면에서도 ABC(AI, Big data, Cloud) 기능이 더해진 효율성 추구 트렌드가 부각될 것이다.

⑩ 포퓰리즘에 맞선 시민의식의 부상

전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2018년에는 글로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국가·사회 이슈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시민의식이 부상할 전망이다. 먼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본인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주체적 시민의 정치·사회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경제·사회 속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동체 수립을 추구하는 글로벌·미래지향적 가치관의 발현이 기대된다. 더불어 변화를 수용하고 국가·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 여타 기관의 책임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1. 개요

-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2018년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경영, 기술, 에너지·자원,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함
 - 정치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글로벌 ‘스트롱맨(Strongmen)’』이 선정됨
 - 경제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New 세계 경제대통령의 등장』, 『Xi’s Reform』, 『레버리지 확대의 시대 도래』, 『Wageless Recovery』 등 4개가 선정됨
 - 산업·경영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선진국의 Tripple Advantage』, 『하이퍼-코피티션(Hyper-Coopetition)』, 기술 부문에서는 『오모 사피엔스(OMO Sapiens)의 등장』이 선정됨
 - 에너지·자원 부문에서 『3-E 에너지 트렌드』가 트렌드로 선정되었고,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포퓰리즘에 맞선 시민의식의 부상』을 트렌드로 선정함

< 2018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

분야	주제
정치	1. 글로벌 ‘스트롱맨(Strongmen)’
경제	2. New 세계 경제대통령의 등장
	3. Xi’s Reform
	4. 레버리지 확대의 시대 도래
	5. Wageless Recovery
산업·경영	6. 선진국의 Tripple Advantage
	7. 하이퍼-코피티션(Hyper-Coopetition)
기술	8. 오모 사피엔스(OMO Sapiens)의 등장
에너지·자원	9. 3-E 에너지 트렌드
사회·문화	10. 포퓰리즘에 맞선 시민의식의 부상

2. 2018년 글로벌 10대 트렌드의 주요 내용

① 글로벌 '스트롱맨(Strongmen)'

- (의미) 동북아시아 주변국 지도자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대두 및 심화되면서 글로벌 외교 전쟁이 본격화 될 전망
 - 2018년 미국, 중국 등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글로벌 '스트롱맨(Strongmen)'들은 '자국 우선주의'의 실현을 내세우면서 글로벌 외교 전쟁을 예고
 - 2017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주변 주요국 지도자들은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굳건한 지지 기반을 확보
 - 2018년에도 주요국의 자국중심주의 외교 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내용) 세계 패권을 두고 미중 간 격돌 가능성 확대를 비롯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전략을 강화할 예상
 - 트럼프 대통령 : 2017년에 이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대한 경제, 정치·군사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 G2 국가 중 하나인 중국에 대해 표면적으로 협력을 표방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환율문제, 무역불균형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
 - 한편 정치·군사적으로도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비롯해 대만문제, 북핵문제 해법에도 대립각을 세움
 - 시진핑 주석 : 시진핑 2기 '신(新)시대 중국 특색 대국(大國) 외교'의 핵심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중국이 최강 대국이 되겠다는 의미
 - 시진핑 1기(2012~2017년)는 對 미국 외교 전략에 있어 상호존중·협력공생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¹⁾를 추구했지만, 미국은 중국의 의도를 불인정
 - 시진핑 주석은 2기 출범을 공식화한 19차 당 대회에서 2050년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새로운 對 미국 외교 전략을 선언

1) 시진핑 주석이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중국의 외교 전략으로,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과 신흥 패권국가인 중국이 상호핵심이익을 존중하면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자는 의미임.

- 푸틴 대통령 : 강력한 '푸티니즘(Putinism)'²⁾을 바탕으로 4선 연임이 확실시되며, 북핵문제 해법에 있어 중·러 간 협조 강화로 對 미국 외교전을 강화
 -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84%(2017.9월 기준)에 달해, 사실상 4선 연임이 확실
 -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정황에 따라, 미·러 간 관계는 악화되었고,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對 미국 공동전선을 강화하는 추세

< 글로벌 '스트롱맨(Strongmen)'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글로벌 스트롱맨 간 파워게임 심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
- 2018년에도 주요국 지도자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중장기적 실리 중심의 외교 강화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
 -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는 북핵문제 해결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로 한국은 균형외교를 통해 북핵의 평화적 해법을 모색

이용화 연구위원(yhlee@hri.co.kr 2072-6222)

2) 푸틴이 구소련의 옛 영토 회복을 위한 대외 팽창에 나서면서 높아진 민족주의적 성향을 뜻하는 말로, 푸틴 대통령의 통치 방식을 지칭. 푸티니즘은 ▲러시아 민족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러시아정교회 중심의 규율과 전통 강조 ▲교육, 문화, 성 문제 등 사회 전반적 보수주의 강화 ▲국가가 주요 산업을 소유하거나 독점하는 '국가자본주의' ▲정부의 미디어 통제 등의 요소로 구성돼 있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박문각).

② New 세계 경제대통령의 등장

- (의미) '세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美 연방준비제도(Fed) 차기 의장으로 제롬 파월(Jerome H. Powell)이 지명되면서 2018년 3월부터 4년간 미국의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수장 역할을 하게 됨
 - 제롬 파월과 2018년에 바뀌게 되는 FOMC 위원들(지역 연준 의장과 이사직)의 성향 등에 따라 미국 통화정책이 변화될 가능성도 상존
 - 더욱이 파월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내용) 파월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금융규제 완화 등의 트럼프 대통령 기조에 맞추며 온건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파월의 성향 : 파월 차기 의장은 통화정책에서 다소 비둘기적인 엘런보다 중립적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이사로 연준에 합류한 파월 지명자는 완만한 기준금리 인상 등 점진적이고 신중한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 찬성해 왔음
 - 경제학 박사가 아닌 법조계·관계·금융계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준 의장들과 대비됨

< 제롬 파월(Jerome H. Powell)의 5대 특징 >

전공/경력	정치학/ 법학(J.D.) 변호사/ 금융인
통화 정책	점진적인 금리 인상 (현기조 유지)
금융규제	금융규제 완화에 긍정적
자산	역대 가장 부유한 연준 의장 순자산 5,500만 달러 이상 소유
FED이사직 수행	2012년에 FED 이사회 임명 지난 5년간 모든 Fed 정책에 찬성 투표

자료 : Fortune.

< 2018년 FOMC 위원 성향 전망 >

	2017년	2018년
연준이사	엘런 -1	파월 0
	컬스 0	엘런 (2월) -1
	브레이너 -1	브레이너 -1
지방연준총재	파렐 0	컬스 ('18년 중반) 0
	더들리(뉴욕) -1	더들리(뉴욕) -1
	카들란(댈러스) 0	물리닉스리치몬드(代) 매파
	에반스(시카고) -1	메스터(클리블랜드) +1
	카시카리(미니애폴리스) -2	윌리엄스(샌프란시스코) +1
	하커(필라델피아) +1	보스틱(애들란타) 0

자료 : Bloomberg Economics.

- 주1) 이사회 3명 공석이고 엘런과 더들리는 2018년 중반에 퇴임 예정.
- 2) -2=비둘기적, 0=중립적, +2=매파적.

- **통화정책 방향성** : 연준 의장을 중심으로 FOMC 투표권자들의 성향에 따라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은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의사 결정에 더욱 무게를 두어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갈 가능성이 큼
 - 2018년 보팅 멤버로 들어오는 지역 연준 총재는 다소 매파적 성향이 강하나 현재 공식 이사직을 포함하여 엘런과 쿨스 등의 대체 인물의 성향에 따라 통화정책 방향은 불확실성이 존재
 - 하지만 예상보다 낮은 물가 수준과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금융규제 완화** : 파월의 과거 투자은행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경우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 시장 친화적 입장을 보일 전망³⁾
 - 도드-프랭크법(Dodd-Franck Act) 개정안인 ‘금융선택법안(Financial Choice Act)’이 2017년 6월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금융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
 - ‘금융선택법안’은 크게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완화, 볼커룰⁴⁾ 폐지, 감독기관 권한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

- (시사점)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미국 금융시장 규제 완화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 미국 통화 정상화에 따른 취약 신흥국 자금이탈 및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해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지

- 미국은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국제적 협력 및 공조가 약화되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큼

정민 연구위원(chungm@hri.co.kr 2072-6220)

3) Bloomberg, Here's What You Need to Know About Powell's Fed Chair Selection, Nov.2. 2017.

4)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은행의 자기 매매 및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의미.

③ Xi's Re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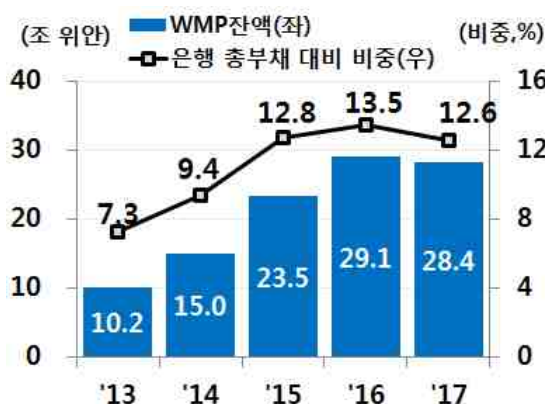
- (의미) 시진핑 정부 2기가 공식 시작되는 2018년에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
 - 시진핑 주석은 제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금융리스크 방지가 핵심 내용인 집권 2기 금융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금융 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시사
 - 2017년 11월에는 금융산업을 통합 관리하는 감독 기구인 '금융안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2018년 금융 개혁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
 - 또한, 공급측 개혁의 일환으로 과잉산업 및 부동산 재고에 대한 국가 주도의 구조조정도 실시할 전망
 - 2018년에는 과잉생산 산업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화하는 한편, 6%대의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운영할 예정
 - 또한, 대도시 중심의 부동산시장 과열 억제 및 부동산 재고 해소 등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
- (내용) 2018년 시진핑 정부의 개혁 중점은 그림자금융⁵⁾ 금융리스크 확산 억제, 과잉생산 산업의 구조조정, 부동산 재고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
 - 금융리스크의 확장 억제 : 중국 경제의 회색코뿔소⁵⁾인 그림자금융⁶⁾ 금융리스크의 확장을 통제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의 정착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인 WMP(Wealth Management Product)⁶⁾ 잔액이 2017년 상반기까지 누적기준 28.4조 위안으로, 은행 총부채 대비 12.6%에 달함
 - 그러나 WMP는 투자처나 수익률 등이 투명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으로, WMP의 10%만 부실화 된다고 가정해도 은행부문의 실질적인 부실대출액 비중은 공식집계의 1.7%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
 - 2017년 출범된 국무원 금융안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18년에는 금융안전 종합 계획이 구체화되고 금융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한 감독 기능이 강화될 전망

5)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단어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요인을 뜻함.

6) WMP(Wealth Management Product, 자산관리상품)란, 은행의 대출자산, 회사채 등을 신탁회사에 넘겨 유통화한 상품으로, 은행의 대출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그림자금융으로 분류됨.

- 공급과잉 개혁 추진 : 철강, 시멘트 등 산업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유희설비 강제폐쇄 등 구조조정 조치를 실행할 전망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과잉생산에 의한 제품가격 하락 및 품질저하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후 및 유희 설비를 강제로 폐쇄하는 조치를 실행
 - 2018년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철강 및 시멘트 등 산업 부문의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고 품질의 제고를 통해 양질의 공급 확대를 꾀할 전망
- 부동산 재고 해소 : 대도시 중심의 부동산 거품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면서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재고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공급 등 다각적인 정책 예상

< 중국 은행권 자산관리상품(WMP) 현황 >



자료 : 中國銀行業協會, 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
 자료로 HRI 계산.
 주 : 2017년은 상반기까지 누적기준임.

< 중국 산업 구조조정 주요 정책 방향 >

구분	조치
유희설비 감축운영	-에너지 효율성, 품질, 등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생산설비 강제퇴출 -신규 생산설비 도입에 대한 엄격한 심사규제 실시
부실기업 정리	-연간 50~100일 생산정지 기간 설정 (시멘트 산업) -국유기업 간 인수합병 추진
신사업 전략 확대	-스마트제조 추진 고효율 설비 도입 -일대일로 투자사업 참여 확대

자료 : 國務院, 工業和信息化部.

- (시사점) 그림자금융 개혁,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 리스크의 국내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필요
 - 그림자금융 규제 강화 및 금융경색 방지를 위한 다양한 통화 조절 수단이나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한계기업 퇴출, 부동산 시장 억제 등 구조조정 과정상 발생하는 돌발 리스크의 국내 전이에 대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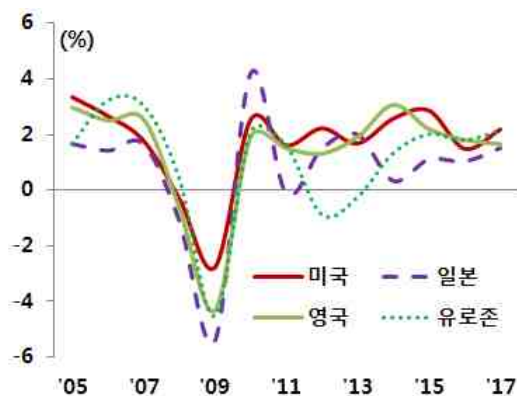
천용찬 선임연구원 (junius73@hri.co.kr, 2072-6274)

④ 레버리지 확대의 시대 도래

- (의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주체들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지속되었다면,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레버리지를 늘리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의 거시건전성 개선 정책,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등으로 경제 주체들의 보유 부채가 줄어드는 디레버리징이 꾸준히 지속
 - 한편 최근 세계 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주요 자산시장 회복 및 투자심리 개선에 따라 향후 주요국의 가계와 기업이 레버리지를 확대하여 소비 혹은 투자를 늘릴 여력이 증가
- (내용) 글로벌 경제 회복세, 주요 자산시장 회복 지속 등의 영향으로 가계 및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부채나 차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제 회복세** : 2018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
 - IMF에 따르면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7%로 2017년 3.6%에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이전의 성장 흐름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경제 회복세를 기반으로 주요국의 중앙은행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선회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18년에도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할 전망이고 유럽중앙은행은 자산매입 규모를 줄일 예정임
 - **주요 자산시장 회복** : 주요국의 주택 및 증권 시장과 글로벌 원자재시장에서 회복세가 지속
 - 미국 등 주요국의 주택 등 자산 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또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증권시장 역시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 등에 따르는 유동성 축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금, 원유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도 완만히 상승하면서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전반적인 회복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 **가계 및 기업 신용 확대 전망** :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 글로벌 자산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가계와 기업의 신용이 확대될 전망
-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전환은 세계 경기 회복세와 자산 가치 상승 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시중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와 기업은 소비 혹은 투자를 위한 신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은행 등 신용기관들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주요국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등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신용 확대 폭은 제한될 수 있음

<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IMF.
 주1) 2017년은 IMF전망치.
 2) 유로존은 19개국 기준.

< 주요국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 >



자료 : FRB, BOJ, BOE, Euro 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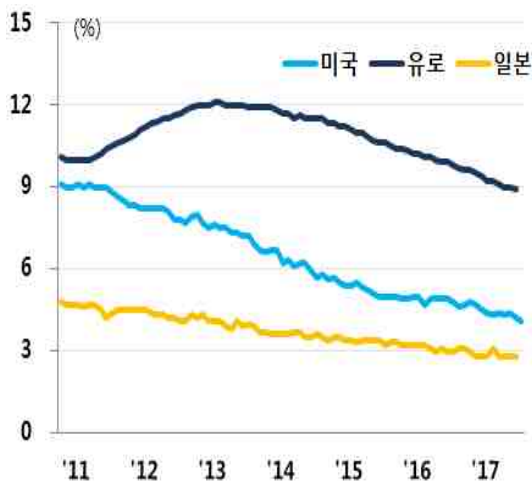
- (시사점) 해외자산 혹은 포트폴리오 투자 등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자산시장에서 외국인자본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에 주의
- 특히 외국인자본 흐름의 급변으로 인해 국내 자산·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오준범 선임연구원(jboh19@hri.co.kr 2072-6247)

⑤ Wageless Recov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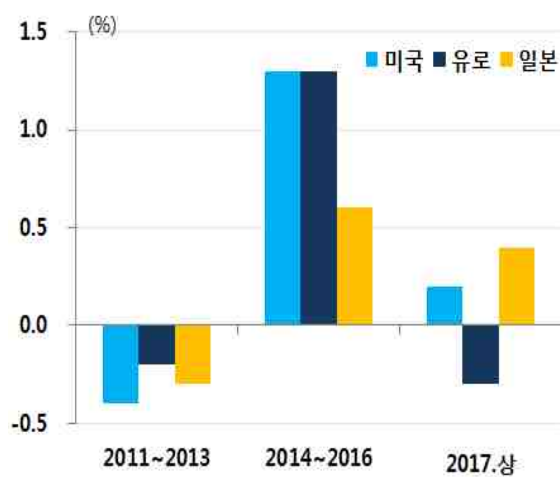
- (의미) Wageless Recovery⁷⁾란 경기 회복과 고용시장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오르지 않는 현상을 의미
 - 최근 주요국들의 고용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임금상승률은 여전히 과거보다 미약한 수준
 - 임금상승률은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 동시에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쳐 통화당국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내용) 임시직 일자리 증가, 저임금 산업 중심의 고용 회복, 베이비붐 세대 은퇴, 노동생산성 상승 둔화 등이 Wageless Recovery의 주요 요인
 - 주요 선진국 고용주들이 정규직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임시직 고용을 선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 이후 회복 과정에서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
 - 장시간 실업 상태에 놓여 있던 실업자들은 기업이 제시한 낮은 임금과 임시직 일자리 제안을 수용

< 주요국 실업률 추이 >



자료 : BLS, Eurostat, 일본총무성.

< 주요국 실질임금 상승률 >



자료 : BLS, Eurostat, 일본총무성.

7) UC버클리대 Robert Reich 교수는 미국 경제가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에서 '임금상승 없는 회복(Wageless recovery)'로 이행해 가고 있다고 지적.

- 일자리가 음식·숙박업 등 저임금 업종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인 금융업, 제조업 일자리 회복 속도는 저조
 - 경제가 성장하며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시간제,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으로 이행해 가는 구조적 요인
 - 금융업, 제조업 등 전통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업종의 일자리 증가 폭은 제한적이지만 음식업, 숙박업 등 저임금 서비스업에서는 일자리가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은 고임금과 저임금 일자리 부문으로 양극화되었으며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 수요는 감소

- 높은 임금을 받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중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 등 역시 임금 상승을 정체시키는 요인
 - 고임금을 받던 베이비붐 세대가 일자리에서 은퇴하고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던 노동력이 이들의 자리를 대체
 - 중·고령층 여성들이 예상보다 많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며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의 일자리에 취업

- 기술 혁신이 늦어지고 투자 감소 등으로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정체
 - IT 혁명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아짐
 - 일본의 경우 낮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생산성이 낮은 업무를 줄임으로써 임금 상승을 회피하고 있음

- (시사점) 미흡한 임금 상승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증가 제약 및 소비 증가세 둔화로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을 낮춰 통화 긴축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존재
 - 가계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증가와 임금인상 두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현재의 더딘 임금증가로 가계가 소비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음
 - 주요국의 낮은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쳐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늦추어질 가능성이 있음

김천구 연구위원(ck1009@hri.co.kr 2072-6211)

⑥ 선진국의 Tripple Advantage

- (의미) 인력, 정책, 시장보호 등의 측면에서 선진국 이점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기업의 자국 내 혜택 활용이 확대될 전망
 -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선진국 경쟁력 강화, 법인세 인하 등 정책적 혜택,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자국시장 보호 등 선진국의 이점이 강화될 전망
 - 글로벌 기업은 선진국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신흥국에서 자국으로 회귀하는 추세가 강화될 전망
- (내용) 생산기지로서의 신흥국의 이점이 약화되는 반면 선진국의 높은 노동생산성, 법인세 인하 및 리쇼어링 정책, 시장보호 등의 이점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기업의 자국 회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노동생산성 : 신흥국의 인건비 상승 및 선진국 노동생산성의 개선 등으로 생산기지로서의 신흥국 이점이 약화되는 반면 선진국의 이점은 강화되는 추세
 - 과거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로 활용되었던 중국은 최근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생산기지로서 신흥국의 이점이 약해지는 추세
 - 저렴한 노동력 활용보다 기술 혁신이 생산성 향상에 더 크게 기여하면서 선진국의 우수한 기술 인프라 및 고급 인력 등의 이점이 부각되는 등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선진국의 경쟁력이 강화
 - 법인세 : 주요 선진국의 법인세 인하 및 리쇼어링 정책 등 정책적 혜택이 강화되면서 선진국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전망
 - 선진국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정책적 혜택을 강화하여 고용 확대, 내수 활성화 등을 추구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법인세 인하 추세가 강화될 전망

- **보호주의** : 정부 차원의 시장보호조치와 더불어 WTO 제소 및 업계 공동 대응 등 민간 차원에서 자국시장 보호가 본격화될 전망
 -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시장보호조치에 따른 혜택은 확대
 - 기업 및 산업 차원에서의 WTO 제소 등을 통해 기업 및 민간 차원에서의 자국시장 보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타국의 무역조치, 저작권 침해 등의 위협에 대해 업계 공동 대응이 확대되는 추세

< 중국 인건비 상승 >



자료 : 중국 통계국, OECD, Bloomberg.
 주1) 중국 평균임금은 민영기업 기준.
 주2) 미국 대비 중국평균임금은 명목 평균 임금에 연간 위안/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

< 해외진출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2011~2016년) >

국가	일자리 수	기업 수
중국 ⇒ 미국	79,540명	745개
독일 ⇒ 미국	54,306명	177개
일본 ⇒ 미국	35,292명	159개
멕시코 ⇒ 미국	19,399명	115개
캐나다 ⇒ 미국	15,787명	120개
한국 ⇒ 미국	10,821명	32개

자료 : Reshoring Initiative.
 주 : 리쇼어링 외에 해외직접투자(FDI)의 회귀도 포함된 수치임.

○ (시사점)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응책 마련

- 정부는 내수시장 확충을 위한 소비시장 확대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공 R&D 강화, 기술혁신 및 창업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함
- 기업 차원에서의 기술 수준 제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한편, 산업내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보호무역에 대비해야 함

김수형 연구원(soohyung@hri.co.kr 2072-6217)

⑦ 하이퍼-코피티션(Hyper-Coopetition)

- (의미) 업종, 규모, 지역, 잠재적 경쟁자 등을 망라한 기술과 사업 영역에서 하이퍼-코피티션(hyper-coopetition)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공 전략으로 부각
- (정의)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경쟁 여부, 규모와 상관없이 동업종·이업종 업체간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형 경쟁(cooperative-competition)’
 - 과거 동업종, 대등한 경쟁자 등 다소 제한된 영역에서 이미 ‘코피티션’이 확산되고 있음
 - ‘하이퍼 코피티션’은 이를 넘어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 업종, 규모, 국경 측면에서의 경계를 넘어서 잠재적 경쟁자까지 포함하는 협력형 경쟁을 의미
 -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르는 솔루션 개발과 공급체인 확대 과정에 필수인 IoT, AI, 플랫폼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다변화된 협력이 전개
- (배경) 제조,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술을 결합한 사업 역량을 갖추고, 시장 지배적인 비즈니스 틀을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의 기술·사업 협력은 불가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핵심 사업 요소인 솔루션 창출, 플랫폼 기반 사업전개, 그리고 신사업 모델 창출에 요구되는 기술·사람·시간 이슈를 글로벌 선도 업체라 하더라도 개별 기업이 해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다른 한편으로 산업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장 선도 기술이라는 위상을 확보하여 진입장벽을 강화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강화

< 하이퍼 코피티션 추진 동향 >

구분	주요 내용 및 사례
기업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AI 기반 플랫폼 기반의 협력 전개. 일부에서는 플랫폼간의 협력인 ‘Platform of Platform’으로 발전 · 스마트 기기 : 아마존 - 밀레·파나소닉 / 카카오 - 삼성전자·현대차 · 자율주행차 : 엔비디아 - 폭스바겐·벤츠·도요타
산업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기간, 기업간 데이터 연계 기반 서플라인 체인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업종 표준적 플랫폼 개발을 지향 · Industrie 4.0 (독일) /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미국) / L3 Pilot Project (유럽 자율주행 통합 표준)
국가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사업 생태계를 형성하여 유리한 시장 개발 위치를 선점. 해외 경쟁자(기관)의 시장 진입을 제약 · 일본-ASEAN Innovation Network / 독일-일본·중국·인도 Industrie 4.0

- (내용) 글로벌 시장 표준화 입지를 구축하고 신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산업 및 국가 차원에서도 하이퍼-코피티션이 형성
 - 기업 차원 : 주로 데이터, AI 기반 플랫폼을 축으로 한 협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플랫폼간의 협력인 'Platform of Platform'으로 발전
 - 제품의 음성인식, 빅데이터 분석 처리가 가능한 AI 기반 플랫폼을 지닌 기술적 우위를 지닌 업체와 이를 활용하여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간 제휴⁸⁾
 - 경쟁자간에도 각자의 플랫폼을 제휴한 'Platform of Platform'을 구축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장⁹⁾
 - 산업 차원 : 기기간, 기업간 데이터 연계를 기반으로 서플라인 체인의 효율성 추구 및 업종 표준적 플랫폼 개발 지향 등을 위해 다양한 업종·업체 참여
 - (미국)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 에너지, 제조 등에서의 IoT 구축 표준화 마련을 목적으로 GE, IBM, 인텔, 시스코 등 다양한 업종·업체가 참여
 - (독일) Platform Industrie 4.0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제조업을 구축하는 독일의 정부, 연구계,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 국가 차원 : 글로벌 사업 생태계를 형성하여 유리한 시장 개발 위치를 선점하고, 해외 경쟁자(기관)의 시장 진입을 제약
 - 일본은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IoT,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아세안 기업과 제휴를 통해 신사업을 창출하는 『일본-ASEAN Innovation Network』를 구축
 - 독일은 Industrie 4.0 적용 확대를 목적으로 일본, 중국, 인도 등과 협력 체결
- (시사점) 하이퍼-코피티션 전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 변혁에 대응하고 신시장 창출에 필요한 핵심 전략
 -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참여를 유인하고 이에 편입할 수 있는 역량 확보 중요
 - 전통기업, 신흥국 기업에 필요한 ICT 역량을 스타트업·벤처업체로 지원하여 혁신 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

이장균 수석연구위원(johnlee@hri.co.kr 2072-6231)

8) 사례 : 아마존의 AI 플랫폼 알렉사를 활용한 가전업체의 스마트홈 기기 개발.

9) 사례 :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간 AI플랫폼 제휴.

⑧ 오모 사피엔스(OMO Sapiens)¹⁰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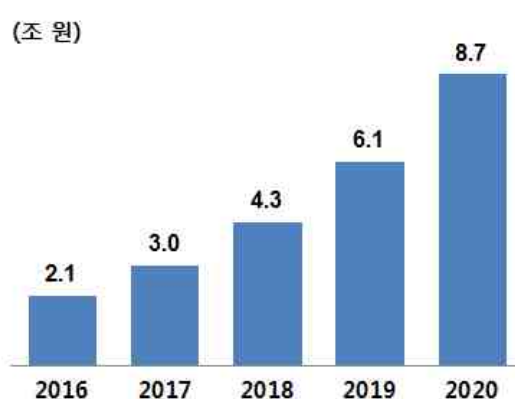
- (의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일상생활 및 경제 활동에서 인간의 행동 방식이 변화
 - OMO(Online Merges with Offline)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세계를 의미
 - 온라인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O2O(Online to Offline) 단계를 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가 완전히 통합되는 OMO 단계로 진화
 - 세계 OMO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8년 374억 달러에서 2020년 756억 달러로, 국내 OMO 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4.3조 원에서 8.4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
 - 급격히 늘어나는 스마트폰 활용률, 매끄러운 결제 시스템, 저비용·고성능 센서, 인공지능의 발전 등 4가지 요인이 OMO의 도래를 가속화
- (내용) 교통, 쇼핑, 교육 등 거의 모든 일상생활 영역에서 OMO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OMO 사업자 간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도래
 - 교통 시스템의 효율화 : 인공지능으로 교통 패턴을 분석하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춰 최적의 경로와 수단을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 세계 OMO 서비스 시장규모 전망 >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국내 OMO 서비스 시장규모 전망 >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0) 리카이푸(Kai-Fu Lee) 시노베이션 벤처 CEO는 <이코노미스트 세계대전망 2018>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OMO 사피엔스'라고 명명함.

- 대중교통, 자가용, 카셰어링, 택시, 공공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장착된 센서들은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로 전송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이동시간,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
 - * 중국의 ‘모바이크(Mobike)’는 자전거, 도로, 목적지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출시 1년 만에 매일 2,5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성장

- **크로스쇼퍼(Cross-shopper)의 증가** : 온라인·모바일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소비 행태가 확산
 - 매장에서는 상품만 확인하고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쇼루밍(showrooming), 온라인에서 본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역쇼루밍 등이 일반화
 - 국내외 전체 소비자 중 크로스쇼퍼의 비중은 60~70% 수준으로 조사되며, 크로스쇼핑의 장점으로 인해 향후 더욱 확산될 전망
 - * ‘F5 미래 상점(Future Store)’, ‘아마존 고(Amazon Go)’ 등 인간의 개입없이 기계로만 운영되는 자율 매장은 고객의 신원과 동선, 행동 방식을 파악함으로써 만족도를 제고

- **OMO 기반 융합 교육의 확산** :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프라인 현장과 무한한 콘텐츠를 갖춘 온라인 공간이 통합된 차세대 교육시스템 구축
 - 강의실의 현지 교사, 원격 강의를 제공하는 원어민 교사, 발음을 교정해주는 소프트웨어, 숙제와 시험을 채점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등으로 구축된 외국어 학습 시스템이 일반화
 -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정보를 결합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추천하고, 최적의 교육자와 학습자를 매칭시켜 줌으로써 성과를 극대화
 - * 어린이를 대상으로 1:1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이아이피키드(VIPKID)’는 중국의 ‘인터넷 공룡’ 텐센트 등으로부터 3억 2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

- (시사점)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OMO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부작용 예방을 위해 노력

장우석 연구위원 (jangws@hri.co.kr, 2072-6237)

⑨ 3-E 에너지 트렌드

- (의미) 국제 원유 시장 수급과 에너지 투자 및 관리 측면의 3-E 트렌드 부각
 - 원유 시장내 수급 균형 여부, 차세대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르는 에너지 관리 효율성 추구 등 부각 전망
- (내용) 국제 유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시장의 단기적인 수급 균형 여부와 함께 중장기적인 친환경 투자 확대 및 4차산업 관련 기술 발전에 따르는 에너지 효율성 강조 등이 예상됨
 - 균형 지속 여부(Equilibrium or not) : 2018년 원유 시장은 대체로 균형에 도달하겠지만 OPEC 감산 실행 미흡 및 미국 원유 생산 확대 강도 등에 따르는 균형 이탈 여부 주목
 - 세계 원유 시장 내 원유 수급은 2015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초과 공급이 축소 되면서 2017년 들어서는 초과 수요를 보임
 - 기술 발달에 따르는 미국 셰일오일 생산은 증가하고 북해산 브렌트유보다 낮은 미국 원유의 가격 경쟁력 등에 힘입어 미국 원유의 수출 물량 역시 증가
 -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르는 원유 수요 증가 및 미국산 원유의 생산 증가 등은 세계 원유 시장 수급의 균형 요인
 - 일부 OPEC 회원국의 감산 실행 미흡 및 미국의 원유 시추기 수 증가 등의 공급측 요인이 시장 수급 균형 이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친환경(Eco-friendly) 투자 확대 : 2020년에 시작되는 새로운 기후체제(파리기후협약) 출범 준비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투자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
 - 파리기후협약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C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함
 - 이로 인해 풍력, 태양열, 수력, 지열, 바이오 연료 등 탄소 배출이 적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이 강조되고 투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주요 선진국들은 파리기후협약 이후 신재생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그 비중을 계속 확대해 왔으며, 특히 유럽은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 소비 비중이 2020년 목표치에 상당 수준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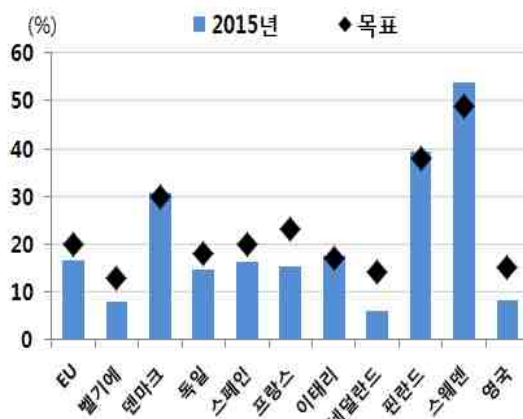
- **효율성(Efficiency) 추구** :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거래 측면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능이 더해진 효율성 추구 트렌드 부각
 - 빅데이터 및 디지털화 진전, 환경 규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의 여건 변화로 도시 인프라 구축 시 에너지 수요 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인 관리 체계 확산 예상
 - 향후 스마트시티 개발 측면에서 중요 요인으로 꼽히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물 설비의 에너지 효율성, 대중교통의 연비 절감, 폐기물의 재활용 등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임
 - 4차 산업혁명 관련 ABC¹¹⁾ 기술 발전으로 리스크 관리 및 수급 규모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제고되면서 기존의 대규모 업체가 주도했던 에너지 저장 및 분배 기능을 중소규모 업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국제 원유 초과공급¹²⁾ >



자료 : IEA, 현대경제연구원.

< 유럽연합 주요국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



자료 : Eurostat.

- (시사점)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친환경 및 효율성 중시의 트렌드에 대응한 신산업 발굴 육성 지속

홍준표 연구위원(jphong@hri.co.kr 2072-6214)

11) A는 AI(인공지능), B는 Big Data, C는 Cloud를 의미함.

12) OPEC의 생산량은 감산 쿼터 총량(2,980만 배럴)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target OPEC' 생산량인 3,250만 배럴로 설정하였고, 비OPEC 생산량은 IEA 2017년 11월 전망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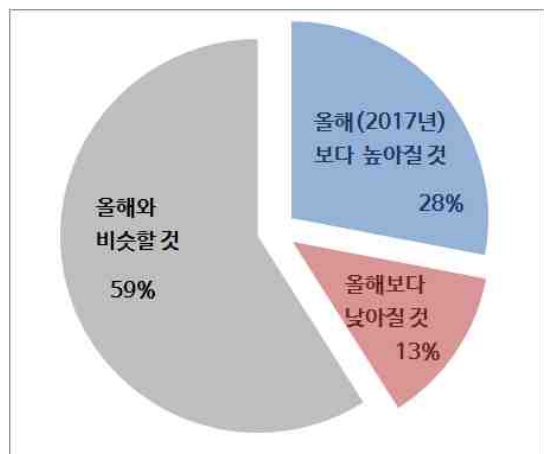
⑩ 포퓰리즘에 맞선 시민의식의 부상

- (의미) 글로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국가·사회 이슈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시민의식이 부상할 전망
 - (배경) 보호무역, 반이민 등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포퓰리즘이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시민들이 증가
 - 장기화되는 저성장세 및 정치 갈등에 따른 대규모 난민 발생의 여파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포퓰리즘이 확산
 - 2016-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오스트리아 쿠르츠 총리 당선, 독일 '독일을 위한 대안안(AfD)'의 선전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호무역주의·반이민(난민)정책을 주창하는 정치인·정당이 선전한 것이 그 예
 - 한편 포퓰리즘 확산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공정무역 훼손과 인권 후퇴 등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시민들이 증가
 - 포퓰리즘의 확산에 맞서 글로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이 예상됨
- (내용) 주체적 시민의 정치·사회 참여 확대, 미래지향적 가치관의 부상, 정부·기업의 보다 높은 책임감 요구 등이 예상
 - 시민 참여 확대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본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체적 시민들의 정치·사회 참여가 확대될 전망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의견 표현이 가능해지면서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개인의 참여 기반이 마련
 - 한편 시민들이 일련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계기로 인식의 변화를 겪으면서 본인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려는 경향이 증대될 전망¹³⁾
 - 예를 들어 여론조사기관인 CivicScience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본인의 정치적 관여도가 2017년에 비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미국인의 비율은 28%를 기록해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인 13%보다 높게 나타남
 - 미래지향적 가치관의 부상 :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글로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 가치관의 발현이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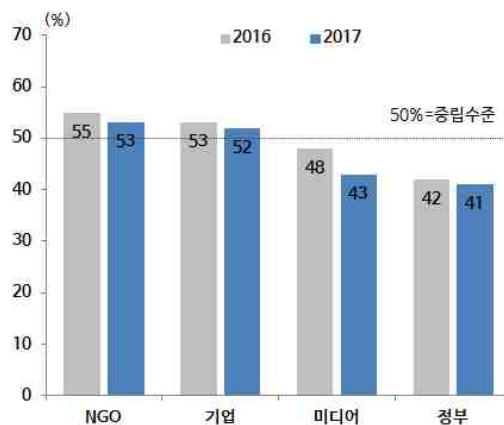
13) 일례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 시민들은 EU 시민들에 비해 더 높은 정치 참여 의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정. ECAS(EU 시민의 권리 제고와 사회 참여를 촉구하는 EU산하의 비영리 조직)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시민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5.7%, 정치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6%로 EU 시민(각각 85.9%, 58.3%)에 비해 높음.

- 글로벌 경제·사회의 급변으로 사회 보편적인 가치가 퇴색¹⁴⁾되면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가치 도출이 필요한 상황
 -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개인의 경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협력적 태도가 중시될 것
- **정부·기업의 높은 책임감** : 더불어 변화를 수용하고 국가·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정부와 기업, 여타 기관의 책임이 더욱 강조될 것
- NGO, 기업, 미디어, 정부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주체들의 활동이 약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신뢰도 하락한 상황
 - 한편 시민의식의 발달과 함께 다보스포럼¹⁵⁾, 부탄의 '기업을 위한 GNH 제도(GNH Certification Tool for Business)'¹⁶⁾, 기후변화협약 총회 등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 기관의 책임과 공조에 대한 요구가 보다 증대될 전망

< 2018년 미국인의 정치 관여도 전망 > <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변화 >



자료 : CivicScience(2017)
주 : 미국인 2,342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 Edelman(2017)
주 : 25개 국가 국민 1,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

- (시사점) 시민의식의 발전에 맞춰 정부, 기업, 기관들은 조직의 목표와 활동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전해영 연구위원(hjeon@hri.co.kr 2072-6241)

14) 시장조사기관인 Edelman이 2017년 25개 국가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가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비중이 56%로 나타났다.
15) 2018년 다보스포럼은 '균열된 세계에서 협력을 강화(Strengthening Cooperation in a Fractured World)'를 주제로 소비·교육·에너지·금융 등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개인, 사회, 국가, NGO 등 협력을 제안할 예정이다.
16) 부탄은 2017년 11월부터 국가 운영의 원칙인 '국가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을 기업 부문에 적용한 '기업을 위한 GNH 제도(GNH Certification Tool for Business)'를 도입할 계획.